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42
----------	------

발의연월일 : 2024. 9. 11.

발 의 자 : 김동아 · 이기현 · 황정아
민병덕 · 송재봉 · 서영교
이정문 · 김문수 · 조 국
백승아 · 김성환 · 김준혁
이재강 · 이언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

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시·군·구 인접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 지역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5항).

나.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제8항 신설).

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시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며, 지역협력계획서는 상생협력,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표함(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신설).

라.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등록한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등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1
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범위는”을 “범위와 매장면적의 산정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구를 말한다”를 “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접지역”을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 및 이유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작성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점검하고”를 “매년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 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범위와 동일하며 그 범위의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상권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상권영향평가기관의 활동 지역 설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상권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⑤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

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를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사실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규모점포등을”을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전부”로 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

5.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

제4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제45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

2의3.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

제52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자

1의3. 제8조의4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u>범위</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 ----- --. ----- -----범위와 <u>매장면적의 산정기준</u> 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u>지구</u> 를 말한다.	7. ----- ----- ----- -----지구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u>이하 같다</u>)·군수·구청장(자

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생략)

<신설>

-----해당 대규모점포
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지
역-----

-----.

⑥ -----

-----15
일-----

-----.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
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
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 및 이유 등
을 회신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신
설>

<신 설>

-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서에는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
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작성 범위 일
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
·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권영향평가서 및 지
역협력계획서의 작성 등) ①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의 작성 대상 업종은 해당 대
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서 작성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범위와 동일하며 그 범위의 일
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
·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③ -----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매년 점검하고-----

-----.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의4(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대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상권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상권영향평가기관의 활동 지역 설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상권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⑤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업무를

<신 설>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
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
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
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
니 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대규모점포등개설
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사실
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
포등개설자가 제8조에 따른 변
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개
설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
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규모점포등개
설자에게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명
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직권으로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규모점포
등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
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생략)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

-----.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전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③ ~ ⑥ (생략)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 (생략)

2. ~ 7. (생략)

런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

5.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
가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

-----.

1.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상권
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제45조(보고)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제45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

2의3.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

3.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p><u><신 설></u></p> <p>2. ~ 2의9. (생 략)</p> <p>④ (생 략)</p>	<p><u>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 한 자</u></p> <p><u>1의3. 제8조의4제3항제2호를 위 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u></p> <p>2. ~ 2의9.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